



제2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2018년 제2차 회의록

2018. 6.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논의

〈평생교육과장〉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안건에 대한 설명

(보고 종료)

〈○○○ 위원〉

-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2년 동안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를 흥사단에서 잘 운영해 주셨고 내년 4월부터는 센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 같습니다.
- 이런 변화에는 민주시민교육이 다른 평생학습시설이나 기회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결합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그 안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말씀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시민교육의 대외 효과나 파급력을 강화하면서도 좀 더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형태의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별도의 조직을 둔다고 하였고, 지원센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진흥원의 한 개의 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평적 구조로 빠지는 형태의 거버넌스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 사무실은 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내에 설치하고 센터장은 민주시민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공개모집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저도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거 같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분명한 점, 논의되어야 할 점들을 자유롭게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조례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역할이 종합계획 수립 시행인데, 저는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민간위탁의 방향이 그려지는 체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

- 올해 것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 3년 단위로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처음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초기 부터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자문위의 중요한 역할이 종합계획 수립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경과 과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과장님 답변해주시겠어요?

〈○○○ 위원〉

- 우선 민선7기에 앞서서 내년도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안건하고 종합계획 하고의 연관성은 의문이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위원님 말씀은 종합계획 안에서 논의가 돼야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 그런 측면도 있고, 시에서 안건을 정해주면 여기서 논의를 하는데, 안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별도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고, 다음번에 논의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네.

〈○○○ 위원〉

- 대개는 종합계획을 시행 주체가 마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센터 이야기를 먼저하는 것은 센터의 향방이 결정되고 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거기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민간위탁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시의회에도 제출해야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추진 배경을 보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 위원〉

- 네.

〈○○○ 위원〉

- 현재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 위원〉

○ 아닙니다.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지난번 회의 못 나와서 상황을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센터 위탁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평가되기 전에 이런 안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원센터의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안건이 만들어진 것이죠?

〈○○○ 위원〉

○ 지난번 자문위에서 흥사단이 그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처음에 할 때 공공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진행됐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 위원〉

- 평생교육진흥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확인한건가요?

〈○○○ 위원〉

-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올린 것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흥사단에 계속 맡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처음에 ○○○ 위원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별도의 법인, 시 출연기관을 만들자는 것은 이중적이고 중복적이라고 보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센터를 만드는 등 이런저런 고민 끝에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은 안 맞고 기존의 시의 공조직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다만 그 위상을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두지 말고 진흥원 바로 밑에 두어 독립적으로 두어, 전담성, 공공성을 가지는 쪽으로 가자고 평생교육과에서 고민 끝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 위원〉

- 4페이지 보면 2016년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성 부족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공공성 부족이 어떤 면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처음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민간위탁으로

공모해서 특정 민간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공공성에 맞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걸려있어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맞는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

-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 것인가요?

<○○○ 위원>

- 특정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저번에 평가할 때도 보면 흥사단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특정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단체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토론회에 가보면 그런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시범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겠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 전체적인 틀 속에 서울시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은
저희가 당연히 수립해야 되고, 이것이 조금 급해서 시기적으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

- 어쨌든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번 달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결정에 흥사단이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 잘하셨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냈는데 다만 이 사업이 주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의 내용을 중립적으로, 행정적 효율적으로 하려는 장치들을 모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흥사단도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봅니다.
- 지난번 회의에 몇 번 참석해 보면 시민단체들이 흥사단에게 불만이 있었고 흥사단에서도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흥사단이 편치 않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조심스럽기는 한데, 처음에 저희가 여기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그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4개 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참여를 했고요. 주요 결정을 4개 단체가 했었고, 학회를 포함해서 10여개 기구가 참여하는 운영위를 꾸려서 운영위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운영위 자체도 운영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는 객관성을 견지하려고 그러한 노력을 했었고요.
- 저희가 들은 이야기는 공모 사업에서 떨어진 단체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했었는데, 그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심사위원들을 모셔다 심사를 맡겼는데 심사위원이 결정한 것을 센터에서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고,
- 그런데 서울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단체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저희 센터와 관계없는데 마치 센터가 견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로서는 억울하지만, 이런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 심사위원들은 그렇다면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옳다고 보여 거기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객관적인 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공공성 부족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구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 자체로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공공성이 의심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기초 지자체까지 나가게끔 권장되어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을 통과 못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는 자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 위원>

- 흥사단에서 지난번에 심사위원을 해보니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공공성하고 독립성 부분에서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만든 것은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성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면 되겠고, 독립성은 센터장을 별도로 초빙해서 하면 되는것으로 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흥사단에서 잘해오셨는데 이 방법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위원>

- 자문위원 활동하면서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2년 동안 잘해주셨고,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방식이 실패한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을 체인지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의 모델이 적절한 형태로 정착된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위치나 성격으로 볼 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추진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먼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속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로 봅니다.
- 앞으로의 방향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이 공공성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야지 공공성이 확보되는 이런 좁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이 초장기다보니 공공성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보장되는 접근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식보다는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공적 성격을 가진 서울시의 조직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하고 동의 행정체계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행정조직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참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를 하는 네트워크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성의 확보를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접근성의 측면으로 보아 평생교육진흥원에 독립적인 형태로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

- 앞으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볼까 고민이 생깁니다. 제가 2년 동안 흥사단에 위탁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은 서울시가 과연 민주시민교육을 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왜냐하면 흥사단에 맡겨진 것은 행정 위탁인데 공모를 해서 나눠주는 일 말고는 없어요.
-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하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방향과 목표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계속 흔들렸는데 실제로는 제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법도 안 되어 있고 조례는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요.
- 흥사단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흥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진정하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인 전문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방향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흥사단에 하나도 자율성을 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고만 계속 받은거예요.
-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저는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흥사단에 주자라고 하는 것도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일단 평생교육진흥원에 들어가면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 지금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별도의 운영체계라고 하면 모든 시스템을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예산집행시스템, 지원하는 시스템 등이요. 어차피 흥사단에서 하나 진흥원에서 하나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럴 바에는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시민교육이라 하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인데, 공공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흥사단에 위탁을 했던 거 같아요.
-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저는 조금 더 면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독립된 재단 방식으로 운영을 하되 독립된 재단 방식으로 가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그 안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들어가든 흥사단에서 계속하든 아님 다른 단체를 공모를 하든 저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독립된 단위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서울시의 의원들이 상당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방향성을 가질거라고 생각이 들고
-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밖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거꾸로 가고 있고 경기도는 다시 밖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경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조금 더 향후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그 속에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절차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가도 된다고 봅니다.

〈○○○ 위원〉

- 저는 지금 안이 과도기로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년에 흥사단에서 종합계획 발표했을 때 봤고, 그 과정마다 센터 오팀장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플랫폼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가는 것은 유의미한데 과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공공의 자원과 네트워크, 편견없이 접근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 위원님은 그것이 오히려 접근성을 해한다고 보는 건데 단점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가 만들어내는 민주시민교육에서 여러 자원을 동원하고
- 한 시민단체 안에 정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독립성을 갖춰가는 과도기 단계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 만약에 이 형태로 간다면 흥사단이 2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 등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흥사단이 고민이나 시행 착오했던 것들을 새롭게 설립하는 단체 구성원들에게 의미있게 전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고용승계가 될 거예요.

<○○○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위탁방식이 되더라도 저희는 내년 초까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재위탁이 되어야 하고 아마도 흥사단은 참여하지 않을 거 같아요.
- 그래서 이 방식은 흥사단과는 관계없는 방식이 될 거고 새롭게 공고를 해서 뽑을테니까.
- 서울시 조례와 센터가 생기고 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져서 현재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가고, 그렇게 보면 서울형 모델이 전국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제안할 내용인데, 민주시민교육 지방협의회를 제안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추세이고,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자율성과 역동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서울형 모델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인프라도 좋고

하지만 서울시의 모델이 한국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질려면 독립된 법인으로 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 한편으로 최근에 선거연수원, 새마을, 자유총연맹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조레나 센터의 큰 움직임이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다른 방향의 시민교육을 했던 곳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상대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인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 독자적인 법인 체계라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또 하나의 다른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독립 법인이 직접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말고 별도의 법인체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민교육까지 다 포함하는 별도의 법인체거든요. 시에서 출연하지만 이것 말고 별도의 법인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 위원>

- 평생교육영역에 보면 시민참여라는 부분이 있고, 작년에 평생교육에 가니까 시민참여 분야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반성과

함께 2분기에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아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흐름이지 않았나 싶어요.

- 시민이 참여하고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참여, 학습할 수 있는 것은 민주시민교육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게 보편화되어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 한데
- 시민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학습 분위기를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시민교육 부분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평생교육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좀 더 강화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보거든요.
- 스웨덴 방식이 그러거든요. 독립된 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위원회가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자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조건이 필요할거 같아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다음 단계로 독립형 법인을 상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강조한 것이 공공성, 접근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가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학습하는데 시가 재정이나 콘텐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초창기다보니 시의 어떤 조직에서 민주시민이나 시민학습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센터 형태로 있다 보니까
- 그런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 모두에게 참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게 우리 모두 '시민의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서울시가 시민들이 학습하는데 지원한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런 측면에서 진흥원의 형태로 가되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콘텐츠는 센터와의 연계라든지, 시민단체가 가진 노하우, 강사풀 이런 것을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이런 인식들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누가하든지 간에 오히려 행정조직이 직접 챙기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독립적인 형태를 고민해보는 것이 좋고
- 실제로 스웨덴 모델이 있었어요. 높이 평가되고 있고 한국도 그런 부분에서는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것은 향후 과제로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

-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개의

시민대학을 하고 있는데, 100개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424개의 동 단위까지 시민대학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 운영 주체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것입니다.

- 시에서 기존에 하려고 하는 것까지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보편성,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기존에 단체가 하는 것 보다는 그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서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서울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과의 연계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자체 사업도 확장해 나갈 것이고 일단 시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도약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시 단위인지, 전국 단위인지?

<○○○ 위원>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 위원>

-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의 별도 조직이라고 되어있는데?

<○○○ 위원>

-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2개의 계선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아닌 별도의 라인입니다.

<○○○ 위원>

- 저는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해보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는 인식이 잘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 강의 안에 민주시민교육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저는 초장기다 보니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인식 문제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향을 공감합니다.

<○○○ 위원>

- 겉으로는 진흥원인데 그 안에 자유시민대학, 동 단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고요.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큰 난제 중의 하나가 에이전트가 없다는 것이고요. 손발이 없어요. 예산 약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민교육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민교육인지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시민교육이란 평생교육에서 하는 내용과 상당히 겹쳐있는 거죠.
- 지금까지 이 집단 내에서의 관점은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하는 정도의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테두리를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왔습니다.
-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경계가 상당히 희미한 것이죠. 경계가 분명치 않죠. 그러다 보면 내용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정치교육으로 가져가자 이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흡수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고 범주를 넓혀가는 데 한계가 있고,

-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인문 교육 안에 민주시민교육을 넣는 것이 효과도 좋고 사람들이 접근하는데도 좋고요.

〈○○○ 위원〉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런 일종의 믹싱(mixing)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 행정위탁이기 때문에 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행정단위의 위탁을 위로 올리는 정도인데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위원이 염려하신 것처럼 독립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 그동안 참여해왔던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얼마만큼이나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그 안에 마련된다면 예컨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런 원칙을 강하게 담아서 원장이 조직의 상당 부분까지 관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고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들을 서울시에서 제안해 주시면 이런 큰 문제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년에도 흥사단이 가져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누가하든지 센터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진흥원을 고려한다고 하면 큰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 만약에 제가 시민대학 등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민대학 전체의 정체성을 민주시민교육으로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호랑이 등에 타는 것이죠. 그것을 아예 에이전트로 만들어 버리면 시민교육이 날개를 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는 시장님께서 결정해주셔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이나 방향성, 그리고 예산이 현재에서 확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가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어떤가요?

〈○○○ 위원〉

- 저는 현실적으로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갈 거라면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회의를 해왔던 것이 굉장히 좀 허무하지 않았나 봅니다.
- 민주주의 학습지원은 시민사회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의 과정과 성과를 안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저도 참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퇴보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느낌 이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 예산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그림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위원>

- 시민교육원이 설치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위원>

- 네.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서울의 다양한 시민단체든 아니면 다양한 풀뿌리의 성과를 안고가면서 그들의 원하는 방향에서 올라가는 상향식의 그런 지원센터를 꿈꿨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퇴보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 위원>

- 목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과연 서울시가 그쪽으로 가는 현실적인 철학적인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별도 법인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시민교육원을 설치하는 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위원>

- 저번에 독일 출장 갔을 때 연방정치교육원을 둘러보고 느낀 점은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시도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장마다 이념과 성향이 다르고 그런 단체장에게 그런 교육이 얼마나 독립적일까 보고요.
-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은 가장 큰 지침이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즉 모든 시민교육을 모든 각계의 모든 정당, 단체에서 만들고 교육제도 자체도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 과연 민주정치 교육원이 서울시 산하에 있어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과연 시도단위에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평생교육 하에 민주시민교육, 정치참여교육 카테고리가 법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있는 시민참여라든지 정치참여 시민교육을 위해 별도의 시민교육원을 만들면 법테두리에 맞지도 않는 것이 되고
-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독립된 법인체로 보고 있고, 그것 말고의 별도의 독립된 법인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 독일의 정치교육원은 사실 지역이 다 있어요. 전국이 있고 주가 따로 다 있어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전국 단위에서 하는 일과 지역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 위원>

- 그와 같은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정치교육이죠.

<○○○ 위원>

- 스웨덴도 시민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지역 시민교육위원회도 있어요.

<○○○ 위원>

- 그것은 평생교육입니다. 그것은 정치교육이 20%도 안 됩니다.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논의를 해 나갈 때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교육 내용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폭을 넓혀서 할 것인지가 항상 관건이었잖아요.
- 정치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요. 그럴려면 조직도 상당히 특화하는 것이 맞고
- 반면에 폭을 넓혀서 시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 갈거면 다른 기관과 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래서 저도 아까 시민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 실제로 저는 시민교육은 지금 말하는 ‘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고 왜 시민교육이라고 한 건가.’ ‘과거에 시민교육이라고 했던 것을 왜 ‘민주’자를 붙여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던가?’ 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이런 것을 생각을 했던거고,
-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교육을 개인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해왔다면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성을 강조해야하는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법은 그림을 그릴수도 있고 정치토론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할 수 있는데
- 다만 그 목표가 어디까지냐 개인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활동의 활성화와 진전으로 목표를 두고 할 것이냐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 위원>

- 주민자치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 위원>

- 주민자치도 하나의 단계겠죠. 민주시민교육의 굉장히 높은 단계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치활동의 강화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동안 30년~50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거고 이제 진짜로 민주주의로 갈려면 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속 민주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자치활동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하는데

- 민주시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교육 방식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이쪽을 강화해서 할 때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좀 더 고민이 더 필요하다. 평생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더 한 것입니다.

<○○○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평생 교육진흥원장을 임명하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박원순 시장이 아닌 어떤 사람이 평생교육진흥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센터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려해야하지 않은가요?

<○○○ 위원>

-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독일 얘기도 하고 스웨덴 얘기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치교육원이 정부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 정치교육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흔들림이 작은 거고요.
- 또 하나는 한국사회는 그런 논리에 휘말리다 보니까 법제화도 안 되어 있고 진영 논리인 거잖아요. 어느 쪽이 이겼을 때 그 당시에 흔들어 버리면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이나 그것은 체제교육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아니고
지향해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휘둘리거나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 가고
안가고 논의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

- 아직 그런 합의가 되어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독립성의 수준이
독일하고 비교가 안되니까.

〈○○○ 위원〉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탄핵을 하는 것 보면 대통령도 비위를
해서 쫓아내는 판인데 시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
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 위원〉

- 시민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의하는 큰 방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 속
민주주의 방향에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니 이 그림 안에 배치된
것이 우리는 공공성 강화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관료화라는 이
름으로 포장될 수 있을 때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같고
- 국장님께서서는 100여개의 동 단위의 다양한 자원 및 네트워크가

이미 있으니 그것을 생활 속 민주주의의 에이전트 개념으로 그려 볼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인데

- 일단은 이 형태로 간다면 이 안에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독립기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느냐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할거 같아요.
- 중간 입장을 조금 고민해본다면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사실 평생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을 넓게 보고 이 안의 주요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큰 저항감이 없지만, 오랫동안 시민단체에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관 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일단 그런 우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민단체 네트워크와 계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도외시킬 수 없고 그런 체제와 같이 끌고 가야돼요.
- 기존의 흥사단에서 할 때 부작용,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역량이나 그런 것이 결코 뛰어나지 않다. 자꾸 외부하고 연계하고 지원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다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분은 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 제가 보기에는 50~60%정도 밖에 맘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보자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향점은 민주시민 교육원이라든지 독립적인 방안이 맞죠. 지금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무르익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아까 ○○○ 위원님 설명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우선 평생교육은 개인중심이다.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요.
- 평생교육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교육하고는 안 맞을 것이다. 이것도 좀 오해 하신 거 같은데요. 가장 강한 정치적인 신념은 가장 깊은 종류의 인간 고민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도있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사회화를 통해서 그냥 묻혀지나갈 만한 것들이 다시 성찰되고 깨지고 다시 조명되고 하는 경우들을 성인들의 학습에서 경험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방법이 기존의 답보 상태인 평생교육에 큰 자극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인 교육의 큰 판을 흔들어야 그 영향력도 커지고 파급력도 커지는 거지 계속해서 섹터리즘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돼요.

- 저도 처음에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흘러오면서 지난 2년 동안 관찰하면서 자꾸만 답보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 또 하나는 시민단체들이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되다보니까 소위 밖으로 확산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역량을 확 펼칠 수 있는 계기들을 자꾸 놓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 저도 공공기관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냐는 확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이 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는 될 거 같다.
-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보자.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장치들을 보완해보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 위원〉

- 잠정적인 것은 언제까지인가요?

〈○○○ 위원〉

- 기간을 정하시죠.

〈○○○ 위원〉

- 이걸로 논의한다면 어떻게 보고가 되는 건가요?

〈○○○ 위원〉

-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에 줄 때 위탁기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줍니다. 또 평가를 합니다.

〈○○○ 위원〉

- 2년 후인가요?

〈○○○ 위원〉

-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주고 평가를 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죠.

〈○○○ 위원〉

- 그러면 바뀌어야죠. 그때도 자문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고 그런 결정은 자문위원회에서 하실 걸로 믿습니다.

〈○○○ 위원〉

- 자문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산하로 두는 것에 대해서 결정했다기 보다는 이러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그건 당연하죠.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 그것과 더불어서 자문위의 위상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계획까지 해서 진흥원이 내년도에 시작하더라도 큰 장기계획의 그림은 여기서 나와서 그릴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위원〉

- 종합계획도 사실 내부에서는 역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분들이 TF를 구성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위원〉

- 한가지 여쭙보고 싶은게 50+센터는 어디서 소속으로 되어있나요?

〈○○○ 위원〉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여쭙본 것은 현재 서울시의 교육 주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뭔가 많다는 것이고 연계가 꼭 필요한 부분에 연계는 없고, 그냥 많아지기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

-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요. 각 기관, 부서별로 각자 역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묶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평생교육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인생이모작도 있고, 기술교육도 있고,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청소년, 노인이 하는 것도 있고 다 나눠져 있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하니까 시민입장에서는 헛갈리거든요.
- 그럼 서울시 평생교육이 과연 민천의 시민대학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강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제가 민천을 갔다 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 정말 기술적인 전문교육, 아마 기술교육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3개월, 1년 짜리 과정, 자격증까지 따는 기술교육이 있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서도 대단한 예산이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어필이 안 되어 있는거죠.
-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의 시민대학운영팀이 생기면서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쉽게끔 정리를 하자. 기관 간 네트워크를 하자. 50+재단, 기술교육원, 우리, 전

체적인 기관끼리 연계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 가져와서 할 수는 없어요. 각 기능부서에서 해야됩니다.

<○○○ 위원>

-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서 어떤 한 분야에서 독점화할 형태는 아니구요. 다만 모니터 정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서울시의 민주시민 의식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척도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안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할 것 같아요.
- 우리 사회에서도 방향, 척도 그런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시킬 건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서울시를 압박해가는 방법도 필요한 거 같아요.
- 최근에 와서 50+에서 하는 일이 평생교육하고 되게 비슷해져가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이 쪽은 닳아가거든요. 어차피 중심축으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건데, 결국은 이 중심축을 흔드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 위원>

-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죄송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분류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교육이나 법 교육 등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범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 이것을 잘 연계를 시키고 단계별로 서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역할 분담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이 한쪽에서 다하든지 아니면 각각 하다보니까 실제로 돈은 많이 쓰는데 각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판단, 정리가 필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때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그리고 다양한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위원>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서울시 평생교육국 관할입니까?

<○○○ 위원>

- 저희 국 산하의 출연기관입니다.

<○○○ 위원>

- 올해 자문위원회를 2번했는데 견학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 위원>

- 다음 위원회할 때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서울자유

시민대학 본부캠퍼스를 올해 4월에 오픈했어요. 서울 전역에 5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 위원>

- 자유시민대학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되나요?

<○○○ 위원>

- 다 정규직이죠.

<○○○ 위원>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 위원>

-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기간 동안은 다 정규직입니다. 다만 위탁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다 고용승계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연기관의 고유 업무로 넘길 겁니다.

<○○○ 위원>

- 제가 듣기로는 좀 달랐는데 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들어서 서울시

에서 자유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직이 아니라면 교육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위원>

-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자유시민대학을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준거라서 위탁기간 내에서만 존속되고 위탁이 끝나면 해지가 되는 건데
- 시에서 줄 때 고유사무화를 염두에 두고 준 것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일단은 위탁을 준 것이고 위탁기간이 지나면 내부적으로 고유사무화 할 것입니다.
- 그러면 출연기관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규직이 아니지만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신분상에 불안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뽑을 때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위원>

- 자문위원회 회의록에 적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관에 구속적으로 일을 하느냐가 100% 좌우한다고 봅니다.

<○○○ 위원>

- 위원님들이 저나 과장이 바뀌더라도 주장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 내년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항에 있어서 지금처럼 공모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가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새판을 짜서 가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안을 드리면 현장은 우리 프레임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거 같아요. 현재는 여전히 우리가 공급자 형태로 주고 빠지고 성과는 ‘몇건이에요’라고 하고 있는데,
- 그렇지 않고 쌍방인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문위 수준에서 고민하기에는 미시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프로그램 종합발표회 같을 때 놀랐던 것이 내용은 좋았지만 여전히 형태는 10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 위원>

- 국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종합계획 TF를 만들어 올해 12월까지 계속 가동을 시켜서 그것은 따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 주어진 과제는 다 수행을 한 거 같고요.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는 말씀드리고
- 그럼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